

도, 수출기업 맞춤형 종합대책 가동

美 고관세 등 통상 환경 대응 위해... 통상정책 대응반 구성
자금·판로·기업 애로 해소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 강화
기업 수요 반영한 내년도 지원정책 수립으로 체감도 제고

전북특별자치도가 미국의 고관세 부과 등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기업을 위한 맞춤형 종합대책을 본격 가동했다.

도는 6일 “수출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유지를 위해 정책금융 확대, 시장 다변화, 통상 리스크 대응 지원 등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미국 정부가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향후 파생품목까지 확대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수출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지난 2월 ‘통상정책 대응반’을 구성해 △수출기업 특

별자금 100억원 신설 △거처기간 연장 자금 600억원 △긴급대환자금 200억원 등 총 9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관세 대응 수출바우처를 신설하고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예산을 늘려 신흥시장 진출을 돕는다.

도는 오는 12~13일 전주에서 120여개 수출기업과 80여 명의 해외 바이어가 참여하는 ‘2025 JB-FAIR’를 열어 신규 판로 개척과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에 나설 예정이다.

기업의 실질적인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해 규제인증 취득 지원과 통상 전문가 1:1 밀착 컨설팅도 강화했다. 전문

가들은 이메일, 카카오톡, 전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상담을 제공하며, 변화하는 통상 환경에 대한 즉각적 대응을 돕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유관기관과 함께 기업 설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미국 통상정책 변화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1,800여 개 수출기업에 정책 정보를 메일링 서비스로 제공 중이다. 또한 ‘미국 통상정책 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해 현장 중심의 대응체계를 공고히 하고 있다.

도는 지난 8월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기업들은 수출바우처·보험료 등 맞춤형 지원(24%)과 해외시장 개척(23%) 확대를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향후 수출바우처와 해외 전시회 단체 참가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재구매 바이어 유치 사업도 새로 추진한다.

아울러 중동·동남아 등 신흥시장 진출에 필요한 ‘할랄 인증’ 지원을 신설하고, ESG·환경 대응 컨설팅(탄소 배출량 산정 등)도 강화할 방침이다.

수출 초보기업부터 중견기업까지 한눈에 지원사업을 확인할 수 있는 ‘전북 수출지원 종합안내서’도 제작·배포한다.

김인태 전북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중소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현장의견과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수출 계약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단기 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 할인, EMS·국제물류비 50% 지원 등 다양한 수출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수출통합지원시스템’(jbsupport.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북 혁신이 여는 국민주권시대”

내일 ‘더민주전북혁신회의 3기’ 공식 출범

더민주전북혁신회의(상임대표 조지훈)가 8일 오후 3시, 전주대학교 스타센터 하림미션홀에서 공식 3기 출범식을 개최하고 도민과의 소통 강화에 나선다.

더민주전북혁신회의는 이날 출범식과 함께 ‘천만결을 민생을 듣다’ 행사를 타운홀 미팅방식으로 동시 개최하며, “전북혁신이 여는 국민주권시대!”라는 슬로건을 공식 선언한다.

이번 3기 출범식은 더민주전북혁신회의의 공식적인 3기 출범을 선언하고 조직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특히, 도민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 ‘천만결을 민생을 듣다’ 프로그램을 타운홀 형식으로 진행하며, 이를 통해 민생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할 계획이다.

현재 더민주전북혁신회의는 조지

훈 상임대표를 필두로 황진, 김용만, 강충상, 여석경, 박지원 공동대표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황명선 최고위원과 박지원 최고위원이 연사로 나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혁신”을 주제로 기초발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조발제 이후에는 황명선 최고위원과 박지원 최고위원이 직접 진행하는 타운홀 토크가 이어져, 참석자들과 함께 혁신과 민생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눌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일반 시민 및 도민을 비롯해 전북 상임·혁신위원, 전국 혁신회의 관계자, 국회의원·지방의원 및 정당 관계자, 그리고 지역 언론 등 약 3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최 측은 밝혔다.

이병철 도의원, 자원순환 촉진 지원 조례안 제정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이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 7)은 의원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순환 촉진 지원 조례안’이 최근에 열린 제4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의 원칙 △도지사의 책무 △홍보 및 교육 △재정지원 △자원의시설 설치 지원 △감량·자원화 유공자 포상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도지사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와 자원화시설 구축에 필요한 비용을 시·군 또는 다량배출사업자에게 보조·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실질적인 자원순환 촉진 기반을 강화했다.

또한 도민의 인식 제고를 위해 매년 홍보·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도록 명시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에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개인에 대한 포상 근거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 문제를 행정 중심이 아닌 도민 참여형 자원순환 문화로 확산시키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병철 의원은 “시범사업 단계부터 실효성 있는 감량 성과를 입증하고, 향후 국비 확보를 통해 전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순환경제 체계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남원시의회 경제농정위 행감 대비 연찬회 열어

남원시의회 경제농정위원회(위원장 염봉섭)는 6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연찬회”를 열고, 감사 준비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이번 연찬회는 제27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에서 실시 예정인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위원 간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 중심의 감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들은 각 부서의 주요 현안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며, 부서별 대응 전략을 공유했다. 또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실질적인 감사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았다.

특히 정유선 교수(한국지방자치학술연구소 전임교수)가 ‘행정사무감사 대비 의원 역량 강화’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며,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질의기법과 사례 중심의 감사 방향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염봉섭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의회의 핵심 기능으로,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산적인 감사가 되도록 준비하겠다”라고 전했다.



‘국립 진안고원 산림치유원’ 개원 둘러보고 있다.

진안군 해발 650m 고원지대에 위치한 국립 진안고원 산림치유원이 6일 개원한 가운데,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산림치유원 내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관련기사 9면>

지속가능 전북, 인구감소 위기 극복 모색

전북지속협 사회위원회, 인구소멸 대응 거버넌스 협력 토론회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실천적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전북특별자치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전북지속협) 사회위원회는 6일 전주 교육대학교 황학당 세미나실에서 ‘인구소멸 대응 지역 거버넌스 협력 토론회’를 열고,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한 협력 방안과 전북형 인구정책 모델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저출산·고령화·청년 인구 유출이라는 삼중 위기를 맞은 전북의 현실을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동의 대응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전북은 최근 정읍의 청년창업 스타트업, 김제의 귀촌 청년 로컬재생 모델 등 주목할 만한 정책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임신·출산 인프라 확충, 복지·의료 접근성 개선 등 생활밀착형

사업도 확대 중이다. 그러나 최근 10여 년간 청년 인구가 25% 이상 감소하는 등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지역의 활력을 위협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북지속협 사회위원회를 비롯해 학계, 의회, 시민사회, 청년단체, 언론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해 지역 거버넌스의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정성훈 강원대학교 교수는 ‘인구소멸 시대 지역 맞춤형 정책과 거버넌스 해법’을 주제로, 김동영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북형 인구 활력 모델 및 협력 거버넌스 추진 전략’을 주제로 각각 기조 강연을 진행했다.

이어 김솔지 전북도의회 의원, 김진산 인구보건복지협회 전북지회 인구사업과장, 김종표 전북일보 논설위원, 김춘하 다이로즈종합교육지원센터장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해 청년 정주 여건

조성, 민·관·학 협력, 지역 미디어의 역할 강화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종합토론에서는 인구감소의 복합적 원인을 짚고, 공동체 회복과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구체적 실행전략, 지속가능한 지역 거버넌스 강화 필요성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경한 전북지속협 사회위원회 위원장은 “토론회는 지역의 중요한 현안을 다 함께 고민하고, 제안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지역 거버넌스 협력의 토대를 다지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는 전북의 지속가능한 인구 정책 아이디어 모색과 현장 중심 실행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력 토론회는 지역사회, 행정, 학계가 협력해 시민참여형 정책개발,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금융 연계 맞춤형 사업 등 전북 특유의 지속가능발전 모델을 점검하고,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실천적 전략을 모색할 공론의 장으로 평가받았다.

도, 2027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보고회 | 행정 분야 신규사업 166건

전북특별자치도가 6일 2027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을 조기에 발굴하고, 실국별 추진 전략을 점검하는 1차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노홍석 행정부지사 주재로 문화체육관광국, 복지여성보건의국, 건설교통국 등 행정 분야 실국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오는 10일에는 경제부지사 주재로 경제 분야 실국 회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도는 이번 1차 발굴을 통해 2027년 반영을 목표로 총 166건, 국비 요구액 2,005억원 규모의 신규사업을 선정했

다. 2028년 사업까지 포함하면 총 171건, 총사업비 16조7,499억원에 이른다.

국가예산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는 만큼 사업발굴 선제 대응 및 향후 추가 발굴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도의 판단이다. 정부가 재정지출을 구조조정하고 절감된 예산을 AI, 에너지, 복지 등 미래 전략분야에 재투자하는 기조로 전환함에 따라, 전북 역시 기존 SOC 중심에서 탈피해 국정과제 연계 및 미래 신성장 분야 신규사업 발굴에 집중해야 한다는 방향이 제시됐다.

다음 달부터는 전북연구원과 국책사

업 발굴추진단을 가동해 대형 국가예산 사업 발굴에 나선다. 도지사 주재 2차 보고회를 열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내년 부처안 확정 전인 4월까지 국비 요구액 8,000억원 이상 확보를 목표로 신규사업 발굴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국가계획 반영, 타당성 조사, 중기사업계획 반영, 예비타당성조사 등 사전 절차도 적기에 완료해 2027년 정부예산안에 발굴사업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완성도를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주민자치회,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

김솔지 도의원, 정책세미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솔지 의원(기획행정위원회, 비례)이 지난 5일,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김솔지 의원은 “전북은 마을만들기 발상지로 주민자치의 씨앗을 뿌린 지역이지만, 주민자치회 전환율이 전국 최하위권이다”고 지적하며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 및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고자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세미나에는 동안대 황종규 교수, 전북도 최창식 자치행정과장, 전북연구원 황영모 선임연구위원, 한국마을자치연구소 이용연 대표, 순창 금과면 주민자치회 조현숙 위원장 등이 참석해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발제를 맡은 황종규 교수는 “주민자치 제도의 입법화는 한국 지방자치와 민주주의가 다음 단계로 전진하는 시금석이며, 진정한 국민주권 시대를 여는 힘이 될 것이다”며 “주민자치 관련 제도 입법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김솔지 의원은 “주민자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지방자치의 전제조건이라고 생각한다”며 “주민자치회 입법화 등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학생 유치에서 정착 중심으로

한정수 도의원, 세미나 개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한정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4)은 6일, ‘외국인 유학생 지원정책의 지속가능한 방향 모색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전북지역 외국인 유학생의 감소 추세와 정주 여건 미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민정책연구원 최서리 선임연구위원은 실무 중심의 한국어 교육, 취업 연계형 인턴십, 권리 보호 제도 강화, 교류 활성화 등을 제안하며 ‘전북 외국인주민통합지원센터’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강진석 전주기전대학 처장은 “유학생 정책은 인구와 산업정책이 결합된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지하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공역형 비자 시범사업이 실질적인 정착으로 이어지도록 행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학준 JTV 기지는 유학생 유치부터 정착·취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호식 도 교육협력과장은 “도·대학·경제기관 등이 함께하는 통합지원협의체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정수 의원은 “이제는 단순히 유학생을 유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졸업 후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유학생들이 전북의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